

2017년도 업무계획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

2017. 1. 6.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일반 현황	1
II. 지난 4년의 평가	3
III.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	5
1. 2017년 방송통신 정책환경	5
2. 비전 및 정책목표	6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7
1.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7
2.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13
3.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17
4.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23
V. 추진 일정	28

I.

일반현황

□ 연 혁

-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 2014. 4. 8.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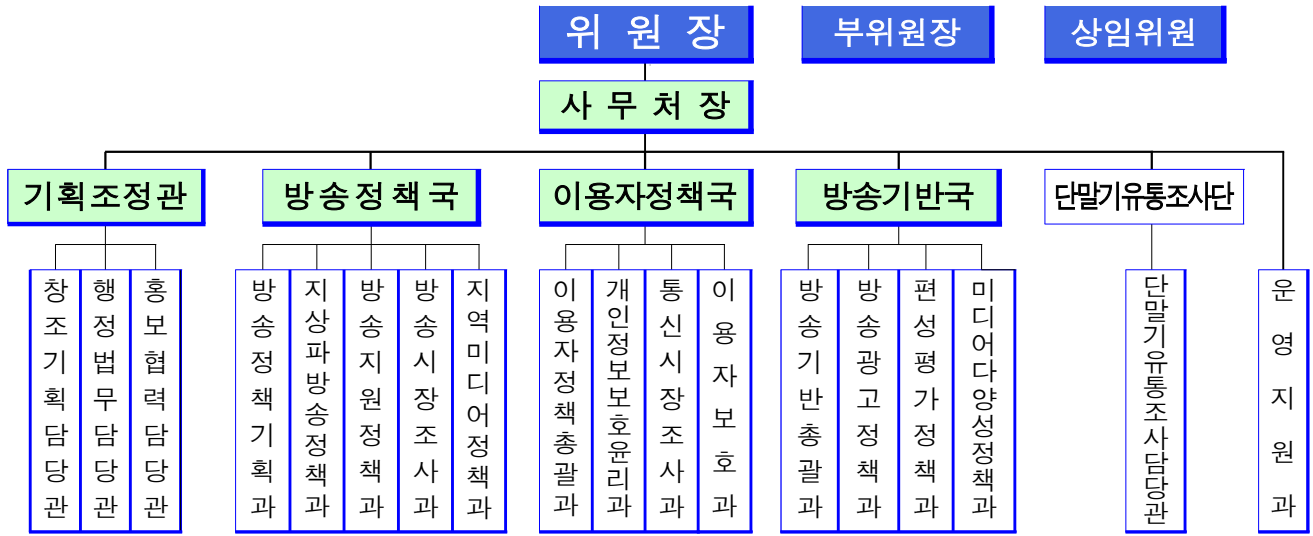
-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정책
 - 방송광고 정책, 편성평가 정책, 방송진흥 정책
 -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

□ 소관 법률

분 야	법 률 명
방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 방송법 (일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일부)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처 3국 1관 18과



○ 정원 ('16.12월 현재)

총 계	정무직	일반직	경찰직	별정직
221명	5명	214명	1	1명

□ 예산 및 기금 : ('16년) 2,273억원 ⇒ ('17년) 2,393억원 [+120억원]

- (재원) 일반회계 54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8억원
- (기능) 인건비 173억원, 기본경비 42억원, 주요사업비 2,178억원

□ 주요 유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요기능	근거법률
한국방송공사 (KBS)	고대영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대상 방송 실시,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사업 등	방송법 제43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우종범	교육·지식·정보·문화·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곽성문	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방송법 제90조의2

Ⅱ.

지난 4년의 평가

1. 2013년 ~ 2016년 주요성과

- (방송서비스 활성화) UHD 차세대 방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16.11월)하고 EBS 다채널 방송(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추진
 - 지역방송특별법을 제정('14.6월)하고 지역방송 지원계획을 수립('15.6월)하여 우수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지역방송 발전에 기여
- (방송제작 여건 개선) 광고총량제 도입('15년) 및 가상·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16년)으로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외주제작 규제 합리화('15.6월)로 제작 환경을 개선
 -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 및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미디어교육 및 방송참여 기반 마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 7개로 확대하여 누구나 교육을 받고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미디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화* 하고, 장애인용 수신기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 지상파, 종편·보도PP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통역 5%
 - ** 저소득층 장애인 TV 누적보급률 : '13년 20%→'14년 22.9%→'15년 35.8%→'16년 45.5% (예상)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화, 체감형 인터넷 윤리교육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스팸 차단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 방지에 기여

- (통신요금·서비스 경쟁 촉진)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하고,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제재 및 자율준수 체계 마련 등 안착 노력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 ※ 단말기 유통법 이후 이용자 차별 해소 및 평균 가입요금 수준 저하, 고가요금제 가입비중 감소 등 가계통신비 감소('14년 15만원→'16년 상반기 14.6만원)에 기여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기반 마련) 개인정보 유출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잊힐권리' 등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산업발전을 지원
- (합리적 규제개선)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 등 불필요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98건을 발굴하여 정비·개선

2. 보완 과제

-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 방송사업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극적인 조정·중재가 요구되며,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여 예방·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단말기유통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속적인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 간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 방송·통신 서비스의 융복합 및 새로운 기술·다양한 매체의 등장 등 방송통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필요

Ⅲ.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

1

2017년 방송통신 정책환경

-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7년 약 61조원(방송 16.2조, 통신 44.9조)으로 전년대비 약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종편·유료방송 부문은 성장하고 있으나 모바일 중심의 시청행태 변화 등으로 방송서비스 시장의 전반적 성장은 둔화
 - 유선전화·휴대전화 등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나,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O2O 서비스 등 IT 기반의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기회도 존재
- 방송통신 시장은 UHD 방송 본격화 및 방송사업자의 OTT 시장 진출, MCN·SNS를 활용한 1인 방송, 결합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미디어 제작과 소비가 다양해지고 사업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미디어 격차 해소 대책 필요
-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IT 기반 新산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보호도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 어느 분야의 규제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전적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글로벌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공조 강화 필요

비전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

정책 목표

주요 업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조성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 제고
- ②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확립
- ③ 미디어 다양성 기반 구축
- ④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지원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제고

- ⑤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 마련
- ⑥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 ⑦ 개인·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 ⑧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조성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 ⑨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 ⑩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 ⑪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 ⑫ 개인·위치정보 보호 환경 조성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 ⑬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 ⑭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 ⑮ 인터넷 윤리 수준 향상
- ⑯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 ◆ 수신료 제도 개선, 재허가·재승인, 방송의 품격 제고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통해 여론 및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①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 제고

□ 추진 배경

- 방송의 공적책임은 방송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되어야 하며,
 - 다매체·다채널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상업적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방송의 품격과 공적책임 유지는 더욱 중요

□ 주요 업무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및 재원 안정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 검토,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회계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수신료 산정 및 검증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 마련 및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공영방송의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와 비수신료의 회계 분리를 추진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 등 검토

-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및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
 - '17년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주요 지상파, 종편·보도 PP 및 종편 미디어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실시

주요 지상파	KBS·MBC·SBS 등 (12.31)
종편·보도 PP	YTN(3.12), TV조선·JTBC·연합뉴스TV(3.31), 채널A(4.21), MBN(11.30)
미디어렐	JTBC미디어컴·TV조선 미디어렐(3.31), 미디어렐A(4.21), MBN미디어렐(11.30)

- (방송의 사회적 역할 강화) 공익채널 정책방안 마련,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도모, 공익광고를 통한 캠페인 등을 추진
 - 공익채널 정책방안 마련 :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축을 위해 현재 1년으로 규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확대 방안을 마련

< 공익채널 현황 >

분 야	채 널 명
사회 복지(3개)	소상공인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과학·문화 진흥(3개)	예술TV Arte, 아리랑TV, 사이언스TV
교육지원(3개)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 개선



- 공익광고 제작·방영 : 다양한 주제의 공익광고를 제작·방영(10편) 하고, 방송사별 공익광고 편성 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
 -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반영 추진
 - ※ 편성 비율 :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 기타 방송사는 0.05% 이상
- 시청자 권익 보호 증진 :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평가원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해외방송 효율화)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 방송의 효율화를 위해 '해외방송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재원 확보의 안정성·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한 효율화 방안 마련
-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근절 및 방송제작자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 추진
 - 선정성·막말 등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수준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방송심의 기준에 반영
 -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확대하고, 방송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방송언어가이드라인 등의 교육 실시
 - 방송대상 '다양성' 부문 및 '방송출연자상' 신설 등 수상작 확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제작 확산 유도
- (방송평가 제도 개선) 재난 방송 등 상대평가 항목의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배점 조정 등을 추진
 - 장애인 및 여성 고용 항목, 개인정보 보호 등 평가 방법 개선을 검토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 추진) 남북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 등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과 협력 유도를 위한 방안 모색

②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확립

□ 추진 배경

- 지진·태풍 등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제공 필요

□ 주요 업무

- (재난방송 효율성 강화) 방송사에 배포하는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 라인을 개선하여 재난유형 추가 및 정보음 등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
 - 기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종편 PP와 라디오 방송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 자연 재해에서 민방위까지 재난 유형을 확대하며, 지진 단계별 정보 및 재난 정보음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국민안전처에서 운영중인 CCTV 및 재난상황 정보를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전국의 터널·지하공간 등 음영지역의 방송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국토부 등과 협의 추진
 - 지자체와 철도·도로 등의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중계기 조기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 시설관리자는 재난방송설비 설치 의무 존재
 - 국토부 「철도설계기준 등」에 DMB를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 협의
- (중요 방송시설의 안전 확보)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을 80개소로 확대하고, 해빙기·하절기·동절기 등 연 3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 '14년 24개소 → '15년 40개소 → '16년 60개소 → '17년 80개소로 확대
 - 방송사의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침해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교육하고, 전문기관(KAIT)을 통한 컨설팅 지원

③ 미디어 다양성 기반 구축

□ 추진 배경

-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고정형 TV 위주의 시청점유율 방식을 보완하고,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다양성 제고 필요

□ 주요 업무

-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 현재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 마련
 - 고정형 TV·VOD·스마트폰 등 개별 시청점유율 합산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적인 산정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도입방안을 제시
 - ※ 스마트폰·PC시청기록 조사기간을 6개월→12개월로 확대 실시하여 통합시청점유율 산정 토대 마련



- (미디어 다양성 조사) 전체 방송사를 대상으로 플랫폼·채널·프로그램 별로 방송의 공급 및 이용 측면의 다양성을 실제 측정
 - ※ 미디어 다양성 조사 지표 개발('15년) → 미디어 다양성 시범조사('16년~)
- (미디어 다양성 증진 로드맵 수립) 미디어 다양성의 체계적 증진을 위해 시청점유율 기준의 실효성 검토, 지역·소수자 등 미디어 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방안, 미디어 다양성 교육 등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④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지원

□ 추진 배경

- 여론 다양성·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방송의 영세성·광고 위축·인력감소 등으로 존립 기반이 약화

□ 주요 업무

- (소유·경영 규제 개선)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1인·대기업 등의 소유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

< 현행 소유규제 관련 법령 >

구분	1인	대기업	일간신문 등	외국자본
지상파(지역, DMB)	40%	10%	10%	금지
종편 PP	40%	30%	30%	20%
유료방송(SO, 위성, IPTV)	없음	없음	49%	49%

-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기획·제작·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멘토링 실시

※ 프로그램 제작 지원 중 경쟁력 강화 예산 : '16년 9억원 → '17년 17억원

- (지역방송 마케팅 지원) 싱가포르 ATF(Asia Television Forum) 등 국내·외 콘텐츠 마켓에 지역방송관을 운영하여 지역방송사의 우수 콘텐츠를 상영하고, 현지 바이어와 매칭 기회 마련 등 마케팅 지원

- (지역·중소방송 결합판매 제도 개선)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감소세 심화로 결합판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됨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공적 재원 등을 활용한 지역·중소방송 지원 등 제도보완 방안 검토

②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 방송콘텐츠의 제작 재원 확충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UHD·MMS 등 신규 방송서비스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등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지원

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한류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작비 상승·방송 광고시장 위축 등 프로그램 제작환경 변화 및 주요 수출국 정책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 필요

□ 주요 업무

- (방송 콘텐츠 재원 확충) 광고총량제 이후의 방송광고 효과 분석 및 시청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방송사와 산업계에서 제도개선의 수요와 효과가 높은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광고의 규제 완화 우선 추진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수출 환경 개선을 통해 한류가 지속적으로 제작·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상파·외주사·학계 등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해외진출 관련 분쟁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 운영 및 한국방송 해외표절 사례집 발간
- (국제협력 강화) 중국의 규제강화 대응 및 한·중 공동제작 협정을 지속 추진하고,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한류 저변 확대

②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 추진 배경

- '16년 지상파 UHD 방송국을 허가하여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후속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 EBS 2TV 시범방송을 통해 지상파 다채널방송의 안정성 검증으로 본방송의 법적 근거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 지상파 UHD 방송이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상황 점검 TF'를 운영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
 -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먼저 개시 후 광역시 및 평창 일원으로 단계적 확대('17.12월)하여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구 분	지역별 방송시기	
1단계	· '17.2월(예정) 수도권 KBS·MBC·SBS	<p>수도권 (17.2월 예정) → 광역, 평창 (17.12월) → 시·군 (21년)</p>
2단계	· '17.12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평창·강릉 일원 지역	
3단계	· '20년 ~ '21년 시·군 지역 등 전국 확대	

- IP기반 지상파 UHD 방송을 인터넷망과 연계하여 시청자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
- (MMS 본방송 도입 준비) EBS-2TV 본방송 전환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MMS 도입 심사절차·편성 기준 등 관련 시행령(안) 마련
 - MMS 채널의 공익적 필요성과 채널 차별화(융합형 교육 콘텐츠 등) 등 EBS의 2TV 본방송 도입계획 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17년 50억원)

③ 개인·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 추진 배경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 발달과 맞춤형 서비스 증가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주요 업무

- (사전동의 예외 합리화) 계약 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사전동의의 예외로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체계 구축
- (비식별 조치 활용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
- (본인확인수단 확대) 신용카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을 제고
-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침해사건 관련 피해구제 등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협약체 활동 참여 확대
 - 아·태지역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통한 국경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APEC CBPR* 가입 및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절차 추진
 - *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을 위해 아시아 권역 국제기구 등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OECD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창의적 위치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모델의 사업화 지원
 - 법제도·기술·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 동향조사, 특허출원 및 창업교육 등 사업화 지원 분야 및 대상 확대 (지원 예산 '16년 25억원→ '17년 12.7억원)

④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조성

□ 추진 배경

- OTT·웹콘텐츠 등 방송통신 융합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한계

□ 주요 업무

- (방통융합 규제체계 정비) 유료방송 VOD·OTT 서비스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VOD에 대한 방송 심의규정 적용 여부, VOD 대가의 방송분쟁조정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방송법상 개념 및 지위를 검토**
 -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분류체계** 정비를 검토하여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광고 개념 확장 등 **광고 체계 정비** 방안 마련
 - (환경 변화에 따른 편성규제 개선) 국내 제작물 편성규제, 지역민방 편성 규제 등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안 마련
 - 특정 국가 콘텐츠의 과다 수입 우려로 도입된 편성규제는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콘텐츠 수입국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개선** 추진
 - ※ (예시) 지상파 방송사 규제 : 국내제작영화(매년 전체 영화시간의 25% 이상), 1개의 국가 영화·애니·대중음악(반기별 분야의 수입물시간 중 80% 미만) 등
 - 지역 민방에만 적용*하는 규제의 **형평성 논란**, 지역 민방의 방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민방 관련 편성규제 개선** 추진
- * 현재 지역민영방송사에만 자체편성비율(29~31%) 규제 적용

③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 ◆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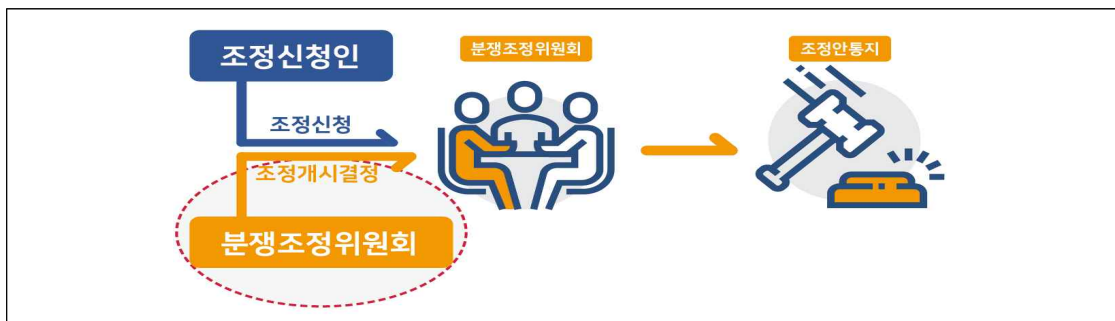
- 건전한 방송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필요

□ 주요 업무

< 방송서비스 분야 >

- (방송분쟁 사전 예방)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방송분쟁 관련 제도개선 추진

※ 現 방송법 제91조 제1항 : 방송사업자 등 상호간에 방송프로그램 공급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국민 관심행사의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출혈경쟁 방지를 위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평창 동계올림픽의 동시간대 중복편성 방지를 위해 중계방송권자 간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추진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점검) 유료방송사, 홈쇼핑 PP 등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추진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에 대한 거짓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 금지행위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 ※ '15, '16년 MSO, IPTV 사업자에 이어 '17년에는 민원빈발 등 중점 사업자 지속감시
 -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편성 변경·취소, 수익배분 방식 관련 편성 불이익 등 방송법 금지행위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 (외주사 제작환경 개선)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 마련
 - '16년에 강화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주 제작물 편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

< 결합서비스 분야 >

- (결합상품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결합상품 시장의 유통망 건전화를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
 -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허위·과장 광고, 해지, 동등결합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

- (자율규제 강화) 온라인 등 비대면 영업채널의 허위·과장광고, 과다경품 등 불·편법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강화
-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합동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 자율협의체 운영

< 통신 서비스 분야 >

-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핀테크·콘텐츠유통 등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통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우려도 증가하여 주요 유형별로 점검 실시
- 법령에 특수관계인 차별 금지 등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사·포털 등의 불합리한 차별, 특수관계인 우대, 중소 CP에 대한 앱등록 부당제한 및 콘텐츠 무상제공 강요 등을 점검
- (중소 유통점 지원 확대) 대형 유통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영세 유통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
- 통신사의 유통망지원센터를 통해 불·편법 영업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유선 판매점의 상생방안을 강구
- 기존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자 협의를 통해 신규지원 방안을 추가 마련
- * 우수 유통점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이통사 직영점 휴무 확대 (월 2회→매주 일요일) 등 시행

②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 추진 배경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취약지역의 위법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금 상한제 일몰 도래에 따른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정비하고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유통구조의 건전성 확립
 - 기존의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 제재 외에 미승낙 판매점과 거래한 이통사·대리점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
 - 신분증스캐너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통사와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 보완
- (단말기유통법 성과 확산 및 보완) 지역·요금제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 제도 보완 추진
 -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시장조사 강화)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위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채널별(일반사이트, 웹카페 등)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 법준수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준수율 제고
 -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이통사·대규모 유통업자와 그 외 유통업자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준 강화

※ 현행은 조사·거부 방해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 추진 배경

-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및 보호환경 조성 필요

□ 주요 업무

-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근거 마련) 신속·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유통사업자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규정 마련
- (집단분쟁해결 제도 도입) 다수인에게 유사피해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 효율적인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 (동의의결 요건 구체화) 사업법 개정 후속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의 직접 필요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정보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웹하드·P2P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
- (불법 스팸 대응 강화)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음성스팸까지 확대하고, 스팸 간편신고 대상을 웹팩스까지 확대
- (이용자 불편사례 개선) 인터넷 상 플로팅 광고 삭제 곤란,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 부담 등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
 - 비필수 선택재 앱 및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 위약금 과다 부과 등 새로운 금지행위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
 -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1일 정액형에서 6시간·12시간 등으로 다양화하고, 휴가철 등 해외출국이 많은 시기에 로밍캠페인 강화

④ 개인·위치정보 보호 환경 조성

□ 추진 배경

- 개인정보 활용 확산으로 정부 주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 및 자율규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점검·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필요

□ 주요 업무

- (선도적 제도 개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생체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 정비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개정법령 시행(17.3월)에 따라, 앱 접근권한 최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비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율 규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설,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
 - 관련 사업자로 '자율규제단체'를 구성하여 회원사 자율지도 및 업종별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 자율 규제 추진
- (취약분야 점검 및 조사 체계 강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모니터링 환경구축·실태조사 및 쇼핑몰·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 유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전문기관(KISA)을 통해 비식별조치 적정성 여부 실태 점검
 - 대형 침해사고 발생 시 미래부·경찰청·KISA 등 범부처·민관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관련 조직·인력을 확대(팀 4명 → 과 7명)
- (위치정보 보호) 허가 여부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 안내(연간 1만 5천개)
 - 주요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암호화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등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4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 ◆ 방송과 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전국민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취약 계층의 방송접근권을 강화

①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 추진 배경

- 미디어는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 교육 필요

□ 주요 업무

- (맞춤형 미디어 교육) 생애주기별·계층별·지역별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참여 능력 제고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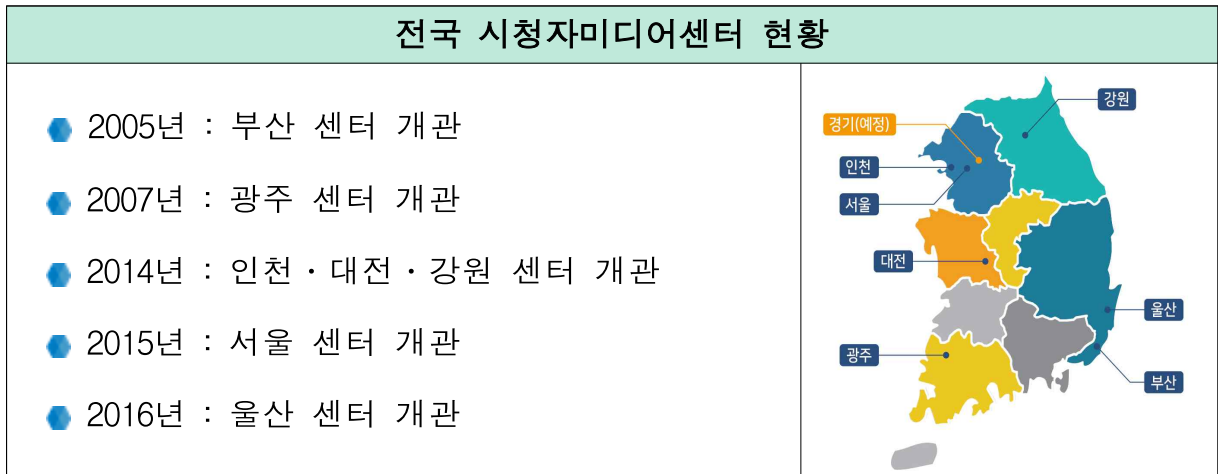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해·활용 및 제작 등을 위한 보편적 교육 실시



- 방송제작 및 상영 등이 가능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제작하여 농·산·어촌 등 미디어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체험교육 실시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 생활 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을 추진

※ 20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뉴스·다큐·라디오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실시 (마을공동체 사례 : 고려인마을 라디오, 월곡동 어린이TV 등)

- (미디어교육 추진전략 및 체계 구축)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디어 교육을 추진
- 전국의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17년 경기권 등에 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지속 확대



※ 현재 7개 센터(부산, 광주, 인천, 대전, 강원, 서울, 울산) → 경기권 등 센터 추가 건립

- 방송의 이해·제작 중심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인터넷 역기능 방지,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의 인터넷 윤리 교육을 연계

※ 방통위의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윤리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력 추진

< 미디어교육 - 인터넷 윤리교육 연계방안(안) >

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효과적인 커리큘럼 구성 등을 위해 기관 간 교육 협의체 운영
콘텐츠·강사 등 교류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윤리 교육에 각각의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교류 프로그램 추진

- (시청자 참여 행사 개최) 시청자미디어센터 소재 지역(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의 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청자 참여행사 개최
- 시청자미디어축제, 장애인미디어축제 등을 통해 시청자 참여 기회 제공 및 시청자권의 증진사업 성과 공유

②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 추진 배경

-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재능있는 인력의 조기 발굴·양성 필요

□ 주요 업무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확대)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 확대('16년 122개교 → '17년 200개교)
 - 학교·학년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영상·다큐·애니메이션 등) 확대 지원
 -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체험시설을 활용하여 방송분야 직업 특강·체험이 가능한 자유학기제 미디어 진로체험 지원
 - 방송광고 분야는 별도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고 직업군에 대한 체험기회 및 광고제작 실습 교육 제공
- *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광고교실' 및 '광고로 키우는 꿈과 끼'
- (거점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 강화) 초·중·고 대학 등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류 등도 다양화
 - 미디어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초·중·고 미디어 거점학교(54→65개교) 및 대학생 학점인증 교육과정(25→30개교) 확대
- (신기술 활용 미디어 교육 실시) 1인 미디어,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신설과 드론 활용 교육 확대('16년 2개 → '17년 7개 센터)

③ 인터넷 윤리 수준 향상

□ 추진 배경

-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될수록 악성댓글, 사이버언어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도 심화되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 (생애주기별·맞춤형 윤리 교육) 대상을 유아·초등에서 중·고등 및 성인까지 전국민으로 확대 (방통위-미래부로 이원화 되었던 사업을 통합)
 - 가정 내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대상별(유아·초·중·고등, 학부모)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5만명→6만명)
 - 인형극, 창작음악제, 인터넷드림단 등 실천형·체감형 교육을 심화
 -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청소년·교사·학부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등 이용환경을 개선
 -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 ※ '15년 333개교 → '16년 531개교 → '17년 760개교(누적) 예정
 - 청소년 스마트폰상의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 문자(욕설, 헐박, 갈취 등)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보급 확대 ('16년 3만6천건 → '17년 5만5천건, 누적)
 - (지능정보사회의 윤리 기준 마련) AI·빅데이터 등으로 생산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윤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용자에서 생산자로 전환
 -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용자·생산자에게 필요한 윤리 기준을 마련
 - (생활밀착형 홍보) 공공시설·버스·지하철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매체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4개*로 분산 운영중인 인터넷윤리 홈페이지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로 통합·운영
-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인터넷윤리문화, 바른어린이네티즌, 스마트정보문화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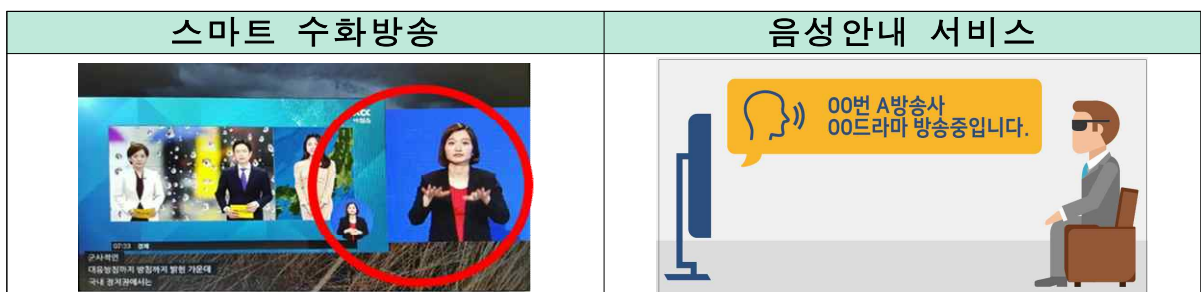
④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추진 배경

- 방송을 통한 정보습득과 여가선용이 여전히 중요한 시대에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을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필요

□ 주요 업무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저소득 시청각장애인 위주 보급을 위해 지자체 업무협약을 확대(12개→17개)하고 지자체를 통한 원스톱 창구 마련
 - 사용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장애인단체·제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TV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대수 확대('16년 15만대→ '17년 16.2만대 누적)
-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장애인방송의 제작·제공시 준수사항 등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여건이 열악한 방송사에는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적 수준 제고 추진
 - * '16년까지 지상파·종편·보도PP의 경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수어방송 5%를 충족하여 양적 목표 달성
-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이용 편의를 위해 스마트 수화방송 및 음성안내서비스 기반 구축
 - 유형별 플랫폼(위성·IPTV·케이블)과 채널(3개)에서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의 안정성 및 기술보완을 통해 상용화 대비
 -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방송서비스 이용을 위해 음성안내 서비스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서비스 실시



V.

추진일정

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주요 업무	실천 과제	소관 부서	일정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 제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재원 안정화	방송정책기획과	연중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및 공정한 심사	방송지원정책과	연중
		방송광고정책과	연중
	공익채널 정책방안 마련	방송지원정책과	상반기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방송광고정책과	연중
	공익광고 제작·방영	방송광고정책과	연중
	시청자 권익 보호 증진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해외방송 효율화	방송정책기획과	연중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	방송기반총괄과	연중
	방송평가 제도 개선	편성평가정책과	하반기
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 추진	국제협력팀	연중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확립	재난방송 효율성 강화	지상파방송정책과	연중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상파방송정책과	연중
	중요 방송시설의 안전 확보	지상파방송정책과 정보보안팀	연중
미디어 다양성 기반 구축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	미디어다양성정책과	하반기
	미디어 다양성 조사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연중
	미디어 다양성 증진 로드맵 수립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상반기

주요 업무	실천 과제	소관 부서	일정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지원	소유·경영 규제 개선	방송정책기획과	하반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지역방송 마케팅 지원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지역·중소방송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송광고정책과	하반기

②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주요 업무	실천 과제	소관 부서	일정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마련	방송 콘텐츠 재원 확충	방송광고정책과	연중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송콘텐츠진흥팀	연중
	콘텐츠 국제협력 강화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	연중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	지상파방송정책과	연중
	MMS 본방송 도입 준비	방송정책기획과	연중
개인·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사전동의 예외 합리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하반기
	비식별조치 활용 지원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중
	본인확인수단 확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중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하반기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 체계 조성	방통융합 규제체계 정비	방송정책기획과	연중
		방송광고정책과	하반기
	환경 변화에 따른 편성규제 개선	편성평가정책과	하반기

③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주요 업무	실천 과제	소관 부서	일정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방송분쟁 사전 예방	방송시장조사과 방송기반총괄과	하반기 연중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점검	방송시장조사과	연중
	외주사 제작환경 개선	편성평가정책과	연중
	결합상품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시장조사과	상반기
	자율규제 강화	통신시장조사과	연중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시장조사과	상반기
	중소 유통점 지원 확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연중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연중
	단말기유통법 성과 확산 및 보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연중
	시장조사 강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연중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근거 마련	이용자정책총괄과	하반기
	집단분쟁해결 제도 도입	이용자정책총괄과	하반기
	동의를결 요건 구체화	이용자정책총괄과	하반기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인터넷윤리팀	연중
	불법 스팸 대응 강화	인터넷윤리팀	연중
	이용자 불편사례 개선	이용자보호과	연중
개인·위치정보 보호 환경 조성	선도적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율 규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중
	취약분야 점검 및 조사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중
	위치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중

④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주요 업무	실천 과제	소관 부서	일정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미디어교육 추진전략 및 체계 구축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인터넷윤리팀	연중
	시청자 참여 행사 개최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확대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거점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 강화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신기술 활용 미디어 교육 실시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인터넷 윤리 수준 향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윤리 교육	인터넷윤리팀	연중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윤리팀	연중
	지능정보사회의 윤리 기준 마련	인터넷윤리팀	하반기
	생활밀착형 홍보	인터넷윤리팀	연중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시청자지원팀	연중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시청자지원팀	연중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	시청자지원팀	연중